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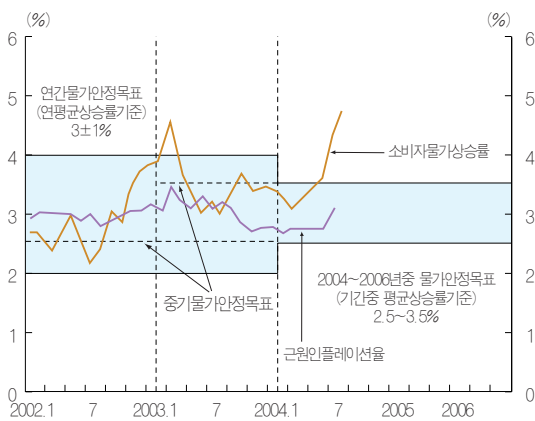
## Ⅲ. 通貨信用政策 運營

### 1. 物價安定目標

개정 한국은행법의 시행(2004년 1월)으로 당해 연도 물가안정목표제에서 중기물가안정목표제로의 이행근거<sup>1)</sup>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2004~2006년중 물가안정목표를 기간중 평균 근원인플레이션을 기준 2.5~3.5%로 설정하였다.

〈그림 Ⅲ-1〉

물가안정목표 및 근원인플레이션율 추이



자료 : 통계청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을 2004~2006년의 3년간으로 정한 것은 통화정책 파급시차,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한 것이다. 목표범위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을 뒷받침하고 기초경제여건에 부합하는 적정인플레이션 수준이 3% 내외로 추정되는 데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2003년에 연간 물가안정목표와 병행하여 공표하였던 중기물가안정목표와 같은 2.5~3.5%로 설정하였다. 목표대상지표는 종래와 같이 소비자물가에서 일기, 국제유가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등락하는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의 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로 하였으며,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여부 평가기준은 통화정책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중 평균상승률로 정하였다.

2004년 1~8월중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년동기 대비 2.8%로 중기물가안정목표 범위내에서 안정되었다.

1) 개정전 한국은행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한국은행이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한국은행법에서는 '매년'이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한국은행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I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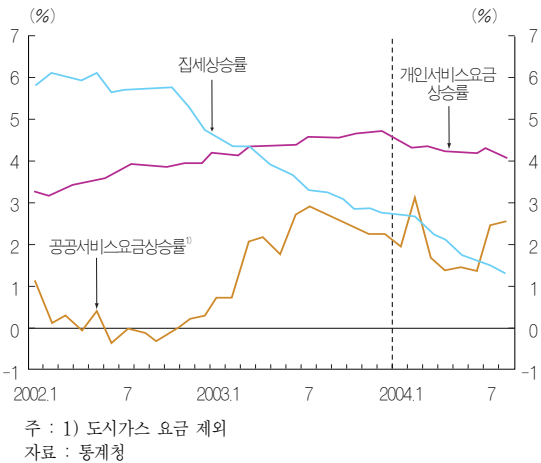
환율 및 국제유가 추이



근원인플레이션을 변동요인별 내역을 보면 민간 소비의 위축지속과 설비투자의 회복지연 등 내수부진이 이어지면서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미미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I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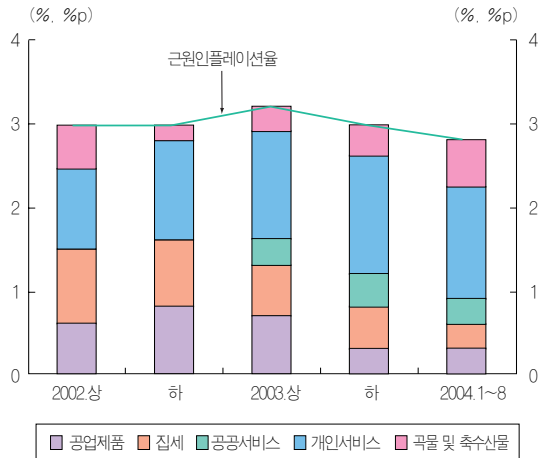
집세, 공공 및 개인서비스요금 상승률 추이  
(전년동월대비)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상반기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7%보다 크게 낮은 4.7%를 기록하여 임금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완화되었다. 1~8월중 원화의 美달러화에 대한 평균환율도 경상수지 흑자지속 등으로 전년동기보다 40.9원 하락(3.5% 절상)하여 물가안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III-4>

근원인플레이션 기여도 추이  
(전년동기대비)



반면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은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옥수수·대두 등 곡물가격과 동·니켈 등 비철금속가격이 세계경제의 회복과 중국의 수요 증가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1/4분기까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국제유가 급등도 근원인플레이션율에의 직접적인 영향은 작았으나 일반의 인플레이션 기대에 영향을 미쳤다.

품목별로 보면 1~8월중 공업제품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 지속으로 전년동기(2.1% 상승)보다 낮은 0.9% 상승에 그쳤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기여도도 0.7% 포인트에서 0.3% 포인트로 낮아졌다. 집세는 신규입주아파트 증가 등으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근원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기여도가 전년동기의 0.6% 포인트에서 0.3% 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곡물 및 축수산물은 광우병 및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등 대체육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7.7%로 전년동기(3.7% 상승)보다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한편, 공공서비스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은 각각 2.0% 및 4.3%로 전년동기와 비슷한 오름세를 보였다.

## 2. 콜金利 目標

〈표 Ⅲ-1〉

주요 경제지표 추이  
(전년동기대비)

	2003				2004			(%)
	연간	I	II	III	IV	I	II	
GDP 성장률p	3.1	3.7	2.2	2.4	3.9	5.3	5.5	-
(민간소비)	-1.4	0.3	-1.8	-1.9	-2.2	-1.4	-0.7	-
(설비투자)	-1.5	1.9	-0.6	-5.0	-2.4	-0.3	6.2	-
(건설투자)	7.6	8.0	7.3	7.9	7.4	4.1	3.8	-
(수출)	15.7	15.9	8.4	14.9	23.1	26.9	27.2	-
경상수지(억달러)p	123.2	-15.2	24.3	37.6	76.6	61.5	70.4	32.3
(상품수지)	221.6	12.4	57.6	68.2	83.5	86.1	104.1	41.5
(서비스수지)	-76.1	-23.0	-16.7	-26.5	-9.9	-18.8	-15.1	-7.7
(소득수지)	6.0	2.5	-10.4	4.8	9.0	2.3	-11.6	0.1
근원인플레이션 <sup>2)</sup>	3.1	3.2	3.2	3.1	2.7	2.8	2.7	3.2
	(2.8)	(1.6)	(0.5)	(0.3)	(0.5)	(1.5)	(0.4)	(0.5)
소비자물가상승률 <sup>2)</sup>	3.6	4.1	3.4	3.2	3.5	3.3	3.3	4.5
	(3.4)	(2.4)	(-0.6)	(1.3)	(0.4)	(2.1)	(-0.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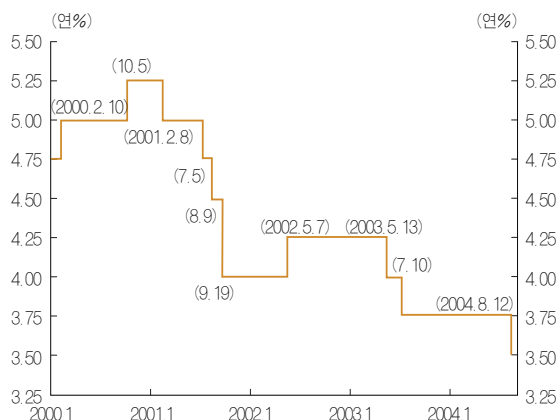
주 : 1) 경상수지는 7월중  
2) ( )내는 전기말월대비 등락률

한국은행은 정책금리인 콜金利 目標을 지난해 두 차례 인하한 이후 2004년 7월까지 3.75%로 계속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8월 12일에는 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가계 및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소비 및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콜金利 目標을 3.5%로 0.25% 포인트 하향조정하고 동시에 유동성조절대출금리와 총액한도대출금리도 각각 3.25%와 2.25%로 0.25% 포인트씩 인하하였다.

이와 같은 금리정책 결정의 배경이 된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 실물경제는 2004년 들어 세계경제의 회복세 확대에 따른 수출의 급진장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의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되었다.

〈그림 Ⅲ-5〉

콜金利 目標 조정 추이



연초에는 지난해 9월 이후 크게 증가한 수출이 점차 내수로 과급되면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1/4분기중 GDP 성장률은 수출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하여, 전년동기대비로는 전 분기의 3.9%에서 5.3%로 높아졌으나 전기대비로는 2.7%에서 0.7%로 낮아졌다. 2/4분기 이후에도 민간소비는 가계의 과중한 금융부채 부담으로 원리금 상환이 늘어난 데 따른 가계수지 악화, 고용사정의 개선지연 및 고용구조의 취약성 등에 기인한 가계소득의 증가세 둔화 및 소비심리 저하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설비투자도 국제유가 및 노사관계 불안 등 국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의 보수적인 경영행태가 지속된 가운데, IT 등 생산과 수출을 주도하고 있

는 업종의 경우 중간재 및 생산설비 수입의존도가 높아 이들 산업의 수출증가가 국내투자로 공급되지 못함에 따라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2/4분기의 전기대비 GDP 성장률이 0.6%에 그치는 등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었다. 이와 함께 IT산업 등에서의 수출증가가 여타 산업의 생산 및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여 수출업종과 내수업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특히 7월 이후에는 가계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심리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세계 IT 경기도 둔화 가능성을 보여 향후 경제성장세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었다. 한편 경상수지는 수출의 큰 폭 증가와 내수부진을 반영하여 1~7월중 16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물가는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에 따른 비용측면에서의 상승압력이 커졌으나, 내수회복의 지연으로 서비스 등 비교역재 가격상승률이 낮아지는 등 수요압력은 미약하였으며 임금상승률도 둔화되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대체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부동산가격도 정부의 잇따른 안정대책으로 소폭 하락하는 등 물가안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졌으나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목표범위내에서 안정되었다. 앞으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비용요인 일부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 목표범위의 상한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우려되나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10.29일) 이후 소폭 하락하였다.

금융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중유동성사정이 원활한 가운데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격차가 축소되었다. 지난해 금융

시장 불안의 원인이 되었던 가계부채와 신용카드사 문제는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자금사정 면에서는 수출호조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과 수출기업은 대체로 원활하였으나 내수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매출부진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발생을 우려한 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어려움이 증대되었다. 한편 시장금리의 큰 폭 하락으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가 늘어났으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큰 폭 유입 등으로 증권투자수지는 1~7월중 113억달러의 흑자를 나타내었다.

〈표 Ⅲ-2〉

주요국의 정책금리 조정 추이

(연%)

	미국	영국	ECB	캐나다	호주
2001. 12말현재	1.75	4.00	3.25	2.25	4.25
2002. 12말현재	1.25	4.00	2.75	2.75	4.75
2003. 2월		3.75			
3월			2.50	3.00	
4월				3.25	
6월	1.00		2.00		
7월		3.50		3.00	
9월				2.75	
11월		3.75			5.00
12월					5.25
2004. 1월				2.50	
2월		4.00			
3월				2.25	
4월				2.00	
5월		4.25			
6월	1.25	4.50			
8월	1.50	4.75			

자료 : 각국 중앙은행

한편 주요국의 정책금리 조정내용을 보면 美연준은 미국경제의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정책금리를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0.5% 포인트 인상하였으며 영란은행도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0% 포인트 인상하였다. 반면 캐나다 중앙은행은 물가가 목표치를 밑돌고 내수 감소폭이 예상보다 커짐에 따라 정책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0.75% 포인트 인하하였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정책금리를 출범 이래 최저수준인 2.0%에서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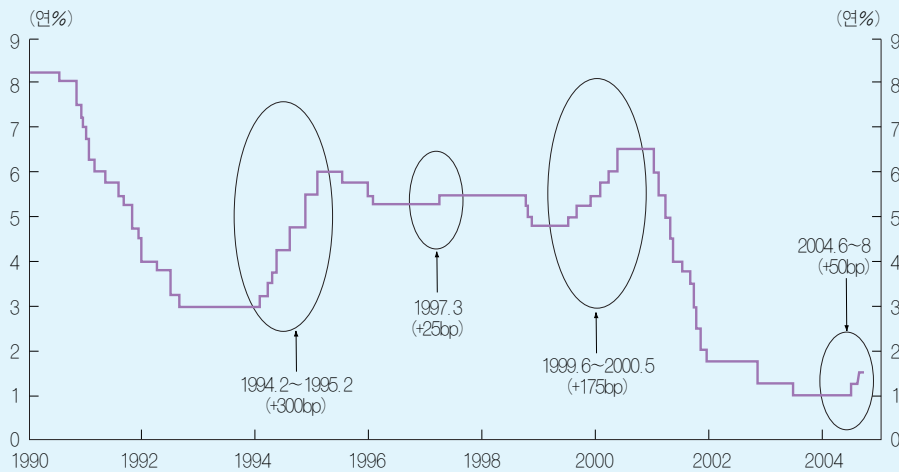
〈참고 Ⅲ-1〉

美연준의 금리인상 배경 및 향후 전망

美연준은 2004년 6월 30일과 8월 10일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각각 0.25% 포인트씩 인상하면서 그 배경으로 미국경제의 견실한 성장세 및 노동시장 여건의 개선과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을 들었다. 다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중 일부는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며 앞으로 근원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 완화기조(policy accommodation)를 신중한 속도(at a pace that is likely to be measured)로 조정하겠지만 경제전망의 변화에 따라서는 물가안정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보다 급격하게 정책기조를 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대체로 향후 FOMC 회의시마다 연준이 0.25% 포인트 내외로 금리를 인상하여 페더럴펀드 목표금리가 2004년말에는 2.0~2.25%, 2005년말에는 4%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1990년대 들어 인플레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美연준의 대폭적인 금리인상조치는 1994.2~1995.2월 및 1999.6~2000.5월에 이루어졌는데 금리인상에 관한 금융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실제 인상조치, 그리고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두 경우에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먼저 1994년에 시작된 금리인상은 미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3% 후반의 견실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준이 2년여에 걸친 완화적 통화정책기조에서 급격한 긴축으로 전환하였다. 1994년 2월 연준의 최초 금리인상시 금융시장에서는 연중 1% 포인트 정도의 금리인상을 예상하였으나 연준은 높은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수준 접근 등을 배경으로 1995년 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3% 포인트의 금리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장기금리가 급등하였다. 반면 1999년에는 신경제 효과로 인한 미국경제의 고성장, 주식시장의 과열(irrational exuberance), 고용호조 등을 배경으로 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 연준이 11개월 동안 총 6회에 걸쳐 금리를 1.75% 포인트 인상하였다. 당시에는 장기금리가 연준의 금리인상에 앞서 미리 오르는 선반응 경향을 보인 가운데 2000년 들어서는 미국의 재정수지 흑자에 따른 국채발행 축소 등으로 장기금리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1990년대 이후 美연준의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추이



이에 따라 연준은 앞으로의 금리인상 과정에서 1994년의 급격한 정책기조 변경으로 인한 장기금리의 급등현상이나 1999년의 금융시장 선반응 등에 따른 장단기금리 역전현상 초래 등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과거 경험에 비추어 금융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진적 접근법(gradual approach)이 구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연준은 이미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시장에 전달하였으며,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빠른 속도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인상이 다수의 예상대로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장기금리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3. 金融市場 安定

#### (金融市場狀況 點檢 및 對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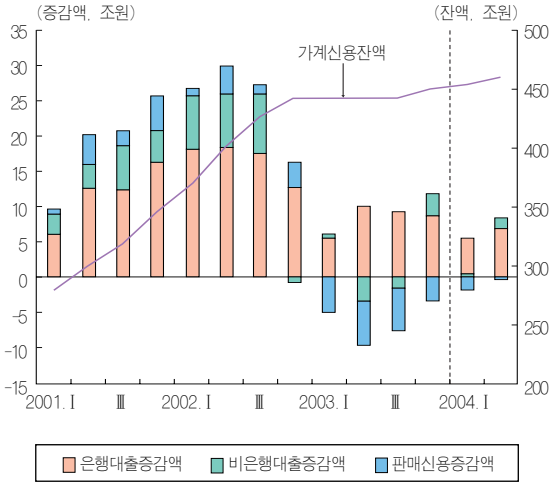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였다.

한미은행의 파업사태 발생(6.25일, 실제 파업개시는 6.28일)시에는 즉각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였다. 파업발생 직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한미은행 파업의 진행상황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에의 영향과 지급결제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예금인출 등에 의한 한미은행의 자금부족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체 금융기관 지준자금을 여유있게 관리함으로써 한미은행의 콜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으며 한미은행에 직원을 파견하여 어음교환 등 지급결제업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였다. 또한 대규모 예금인출의 지속 등에 대비하여 ① 자금에 여유가 있는 은행으로 하여금 한미은행에 콜자금을 공여토록 적극 유도, ② 콜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RP를 통해 한미은행에 자금을 지원, ③ 파업 장기화 등으로 자금부족 규모가 확대될 경우 유동성 조절대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계별 유동성 공급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는 등 한미은행 파업사태에 따른 불안이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로 파급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금융시장 안정 노력의 결과 파업이 장기화(6.28일~7.12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은행으로부터의 예금인출 규모는 2.4조원에 불과하였다.<sup>2)</sup>

2) 2003년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의 조흥은행 파업사태중 예금인출 규모는 5.4조원이었다.

〈그림 Ⅲ-6〉

가계신용 증감 및 잔액 추이



또한 가계 및 기업의 신용리스크, 신용카드사 문제 등 국내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을 상시 점검하였다. 가계부채와 신용카드사 문제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되면서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리스크는 점차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었다.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해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 **Bad Bank** 설립 등 다양한 신용불량자 지원대책, 주택금융공사 설립 등을 통한 장기 주택금융제도 도입, 금융기관의 원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등으로 연착륙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또한 신용카드사들도 연체율이 소폭 하락하는 가운데 모은행과의 합병, 채무 조정, 증자, 조직 및 인력 감축 등에 힘입어 경영상황이 다소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지속하고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하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24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2004년 2월부터 요구불예금과 7일 미만 예치 기업자유예금 금리를 자유화하고 은행 수신과 관련된 잔존규제도 대부분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금리자유화 조치와 함께 한국은행은 금리동향과 시중자금흐름 등 동 조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당초 우려했던 요구불예금 금리의 상승,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간의 대규모 자금이동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연 2회 정기발간, 4월 및 10월)하고 가계 및 중소기업 부문의 신용위험 증가, 비은행 부문의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한 중앙은행의 우려를 시장에 전달하였다.



(共同檢査 실시 및 金融機關 經營實態 분석)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실시 및 금융기관 경영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 등을 통해 은행부문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표 Ⅲ-3〉

공동검사 실시상황

2000	국내은행	한빛, 외환, 대구(3개)
2001	국내은행	한빛, 조흥, 서울, 외환, 평화, 부산, 광주, 경남, 전북, 제주(10개)
	외은지점	시티, 도이치, HSBC(3개)
2002	국내은행	제일, 한미, 신한, 조흥, 국민, 우리, 대구, 기업, 수협, 농협(10개)
	외은지점	도쿄 미쓰비시, BOA, 스탠다드 차타드(3개)
2003	국내은행	부산, 외환, 제일, 신한, 하나, 광주, 경남, 산업(8개)
	외은지점	시티, BNP파리바, JP모건체이스(3개)
2004 1~8월중	국내은행	조흥, 외환, 국민, 한미, 대구, 농협(6개)
	외은지점	HSBC(1개)

2004년 1~8월중 7개 은행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기관 전반의 경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공동검사를 통해서는 은행의 여신운용과 유가증권투자, 자산건전성 등 개별은행의 경영상황에 의해 파생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현장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총액한도대출, 예금지급준비, 지급결제 등 통화신용정책관련 규정 및 조치사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규 또는 오류사항을 적발·시정조치 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제고하였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매월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를 실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및 차입수요, 신용리스크 동향 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2006년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BIS자기 자본규제제도와 관련하여 국내은행의 리스크관리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통해 각 은행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국내경제 및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1월 20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3개 기관이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유관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제를 보강하는 동시에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확충하고 금융기관의 업무부담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Ⅲ-2〉

**신용카드사 경영현황 및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

(신용카드사 경영현황)

2003년중 가계신용 부실화 등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로 큰 손실을 기록하였던 신용카드사들은 2003년 하반기 이후 자본확충과 합병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2004년 들어 경영상황이 다소나마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은행계 카드사들은 모은행에의 흡수합병(국민카드 2003.9월, 외환카드 2004.2월, 우리카드 2004.3월)을 통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감축하였다. 삼성카드는 삼성캐피탈과의 합병(2004.2월), 삼성생명과의 유동성 지원약정 체결(5조원, 2004.3월), 증자(1.5조원, 2004.4월) 등으로 유동성 불안을 해소하였으며 LG카드도 채권단 공동관리방식하에 채무 만기연장, 채권단 및 LG 그룹의 신규유동성 지원(2.9조원, 2004.3월), 채무의 출자 전환(1차 1조원 2004.1월, 2차 2.5조원 7월)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신용카드사들은 손실률이 높은 현금서비스 등 부대업무 비중을 축소(2003년중 53.5% → 2004년 상반기중 39.6%, 6개 전업사 이용 실적 기준)하고 신규회원 모집기준을 강화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였다.

그 결과 신용카드사 연체율이 2004년 들어 뚜렷한 하향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1/4분기중 일부 신용카드사가 흑자를 시현하는 등 수익성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신용카드사 연체율 및 손익현황 추이<sup>1)</sup>

	(% , 조원)							
	2003				2004			
	I	II	III	IV	I	II	III	IV
영 업 수 익	2.9	2.6	2.4	1.7	2.4	2.0	1.7	1.4
영 업 비 용	3.7	3.7	2.9	5.6	3.7	3.6	3.0	4.2
영 업 이 익	-0.8	-1.0	-0.5	-3.9	-1.3	-1.6	-1.3	-2.8
(대손비용차감전)	1.1	1.6	1.1	1.3	1.1	0.5	0.0	1.4
당 기 순 이 익	-0.9	-1.2	-0.8	-4.9	-0.1	-1.4	-1.3	-4.2
연 체 율 <sup>2)</sup>	9.5	9.1	10.0	13.6	12.0	10.9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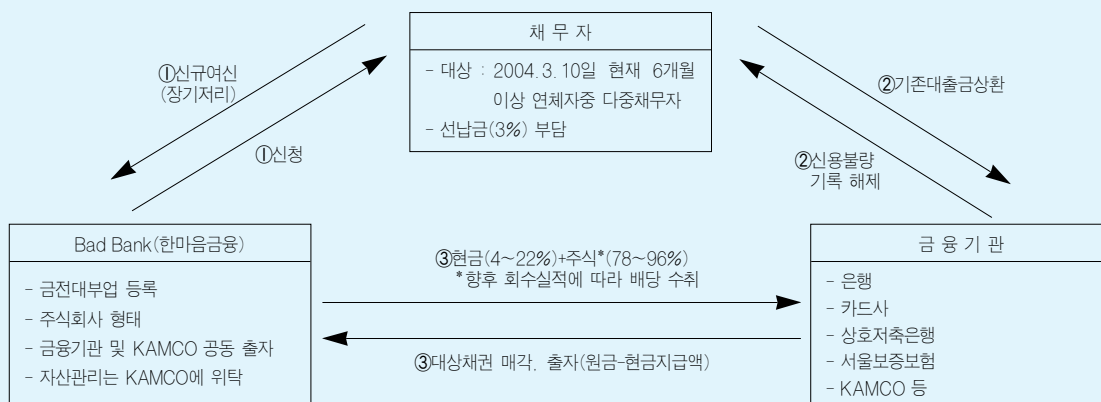
주 : 1) 6개 전업카드사 기준    2) 기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

한편 경제·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이 마련되었다. 먼저 한 개의 금융기관에 의해서만 등록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이 채무 재조정, 만기연장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하였다. 다수 금융기관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원대책이 마련되었다. 첫째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으로, 3억원 이하의 채무자중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05만5천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최대 1/3까

지 채무를 감면해 주고 잔여 채무는 장기 분할상환(8년)토록 하였다. 둘째는 10개 금융기관(은행 5개, 카드사 5개)이 공동으로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상록수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지원으로, 1억원 이하의 채무자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최대 30%까지 채무를 감면하고 잔여 채무는 장기 분할상환(8년)토록 하였다. 셋째로는 Bad Bank(한마음금융, 2004.5.20일 설립)를 통해 채무자의 자발적인 채무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인데, 5천만원 미만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3%를 선납케 하고 선납금 이외의 연체금은 Bad Bank의 장기저리(최장 8년, 연 6%) 대출로 전환해 주고 있다. 이때 원래의 채권금융기관은 연체대출을 Bad Bank에 매각하는 대가로 수익증권 등을 받고 향후 Bad Bank의 대출금 회수실적에 따른 배당금을 수취하게 된다. Bad Bank를 통한 신용불량자 지원은 원금 및 이자를 탕감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원대상자의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을 2004년 3월 10일 기준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또다시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신용불량자로 다시 분류하고 Bad Bank 이관시 유예해 주었던 연체이자도 再징구토록 하는 등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되었다.

**Bad Bank를 통한 다중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지원**



이에 따라 2003년중 급증(+108만명)하였던 신용불량자 수는 2004년 6월말 현재 369만명으로 전년말대비 3만명 감소하였으며 세금채납자 및 법원채무불이행자 제외 등 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감소요인(25만명)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22만명 증가에 그치고 있다.

**신용불량자수 추이<sup>1)</sup>**

	(기말기준, 만명)									
	2002				2003				2004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sup>2)</sup>
신용불량자(A)	245.5 (0.5)	226.0 (-19.5)	245.5 (19.5)	263.6 (18.1)	295.7 (32.1)	322.5 (26.8)	350.2 (27.7)	372.0 (21.8)	376.8 (4.8)	369.4 (-7.5)
신용카드관련	110.6	112.3	130.3	149.4	176.7	198.5	220.4	239.7	259.1	252.0
신용불량자(B)	(6.4)	(1.7)	(18.0)	(19.1)	(27.4)	(21.7)	(21.9)	(19.3)	(19.4)	(-7.1)
B/A(%)	45.1	49.7	53.1	56.7	59.8	61.6	62.9	64.4	68.8	68.2

주 : 1) 2002년 1분기는 신용불량 등록기준 상향조정(5만원 초과→30만원 초과) 이전 기준, 2004년은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세금채납자 및 법원채무불이행자 제외(I분기말 15.0만명, II분기말 14.5만명), ( )내는 분기중 증감

2) 신용불량정보 정비계획에 따른 사망자(10.2만명) 제외  
자료: 은행연합회

## 4. 信用政策

〈표 Ⅲ-4〉

총액대출한도 배정 내역  
(2004. 8월말 현재)

(조원)

구 분		금 액
금융기관별 한도	결 제 지 원 한 도	2.5
	일 반 한 도	2.5
	소 계	5.0
한국은행 지역본부별 한도		4.5
배 정 유 보		0.1
계		9.6

한국은행은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운영하였다.

4월부터 총액한도대출중 지방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한국은행 지역본부별 한도를 4천억원 증액하였다. 아울러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수출업체의 채산성 악화에 대응하여 무역금융에 대한 지원한도도 4천억원 증액하였다.

또한 8월부터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취급 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여부에 따른 총액대출한도 배정시의 차등폭을 확대하였다. 중소기업대출비율 미달은행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차감비율을 7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동 비율 준수은행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추가배정비율은 100% 이내에서 200% 이내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총액한도대출 배정시 반영하는 자금운용상황 평가방식을 중소기업에 대한 한도대출비중 및 중소기업대출의 만기연장비율이 높은 은행이 유리하도록 변경하였다.

내수부진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관리 강화 등으로 내수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는데 대응하여 기업간 상거래대금의 현금결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4월부터 총액한도대출 배정시 감안하는 상업어음 할인실적의 인정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었다. 이에 따라 상업어음할인실적 대비 어음대체관련대출에 의한 현금결제실적 비율은 2004년 7월말 현재 1.59배로 지난해말의 1.42

〈표 Ⅲ-5〉

국내은행의 여음대체관련대출 및 상업어음할인 추이<sup>1)</sup>  
(말잔 기준)

(조원)

	2002. 12	2003. 6	2003. 12	2004. 6	7
기업구매자금대출(A)	11.1	13.5	12.4	14.1	13.9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	3.4	4.4	6.3	6.0	6.6
A+B	14.5	17.9	18.7	20.2	20.5
상업어음할인 <sup>2)</sup> (C)	14.0	12.8	13.2	12.1	12.9
(A+B)/C(배)	1.04	1.40	1.42	1.67	1.59

주 : 1)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기준(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제외)  
2) 중소기업 기준

배보다 더욱 높아졌다. 다만 지방중소기업 및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우선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전체 결제지원한도는 종전의 2.7조원에서 2.5조원으로 소폭 축소되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제도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총액한도대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4월부터 시행하였다. 그 동안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시 적발된 총액한도대출관련 주요 위규 및 오류 사례를 정리하여 각 금융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규정관련 주요 업무질의 및 답변내용을 망라한 통첩집을 제작·배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규정위반 및 실적보고 오류 등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하였다. 또한 공동검사 결과 업무해태 등으로 위규 및 오류사례가 반복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액대출한도 지원규모 차감에 더하여 동 한도 배정시 더 많은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제재를 강화하였다.

## 5. 通貨信用政策 手段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단을 개선하고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 (通貨信用政策 手段의 개선)

한국은행은 단기금융시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91일물 지표금리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그 동안 비정기적으로 발행해 왔던 91일물 통화안정증권을 매월 제1·3주에 정례적으로 발행키로 하고 3월 제3주에 첫 정례입찰을 실시하였다. 그 동안 이자율스왑, 주가지수선물 및 국채선물 등 파생금융상품의 이론가격 산정시 이용되어 왔던 대표적인 91일물 금리는 CD 유통수익률이었다. 그러나 CD는 발행물량이 소규모이고 거래 또한 부진한 데다 발행주기도 불연속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이고 대표성 있는 단기 지표금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91일물 통안증권 발행이 정례화됨으로써 동 금리가 91일물 지표금리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로 인해 파생금융상품시장 및 채권시장 발달과 KOR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 등 은행간 단기금리 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례발행 기일물의 다변화<sup>3)</sup>로 수요기반이 확대되면서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 증가에 따른 차환발행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시간을 시장친화적으로 조정하였다. 그 동안 통화안

3) 91일물 통화안정증권의 정례 발행으로 제1·3주에는 1년 초과 장기물 및 91일물이, 제2주에는 364일물이, 제4주에는 182일물이 각각 정례 발행되고 있다.



정증권 정례입찰 당일에는 동 입찰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중의 채권거래가 대체로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이와 같이 입찰결과 관망에 따른 채권거래 부진 문제를 완화하고 91일물 정례발행에 따른 일중 3회 입찰 가능성<sup>4)</sup>에 대비하여 일중 2회로 되어 있던 입찰 횟수를 3회로 늘리고 입찰시간도 앞당겨 조정하였다.<sup>5)</sup>

한편 한국은행은 관련 금융기관들과 함께 영국의 LIBOR와 유사한 KOR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 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금융기관 자금담당 부서장 등으로 이루어진 「기준금리협의회」<sup>6)</sup>를 구성하여 관련 규약을 제정하고, 4월 12일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7월 26일 KORIBOR를 정식으로 공표하였다. KORIBOR는 국내은행간 단기자금거래시장에서 결정되는 대표적인 단기기준금리로서 은행간 단기자금거래 뿐만 아니라 시장금리 연동대출, 파생금융상품 등의 가격결정 기준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通貨信用政策의 信賴性 제고 노력)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효과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원활히 파급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매월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총재가 직접 주재하는 기자간담회를

4) 제1·3주의 통화안정증권 입찰은 기존의 546일물과 728일물에 91일물이 더해짐으로써 일중 최대 3회까지 가능해졌다.

5) 조정전 : 10:20~11:00, 14:00~14:20

조정후 : 10:10~10:30, 11:10~11:30, 13:30~13:50

6) 「기준금리 협의회」는 4월 1일 한국은행, 전국은행연합회, 8개 시중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 12개 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25일 「KORIBOR 전문위원회」로 개칭하여 전국은행연합회 내에 공식 설치하였다.

통해 정책결정의 내용과 배경을 정확히 알리는 한편 동 회의의 의사록을 「조사통계월보」에 공개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매월 주요 경제연구기관 및 학계 인사들과의 「경제동향 간담회」 및 금융기관장들과의 「금융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외부 전문가의 견해를 청취하고 현장정보를 폭 넓게 수집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고 있다. 아울러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서베이」 실시 등 일반국민과의 의사소통 및 피드백 채널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일반의 이해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화정책 경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일반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행본 형태로 발간된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등의 개정판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인 경제교실을 2004년 들어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으며 이밖에도 청소년 경제캠프, 청소년 경제교육 시범학교, 통계교실, 사이버 경제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중추적인 국민경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6. 支給決済制度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총괄관리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였다.

### (支給決済制度의 安全性 및 效率性 제고)

발행은행과 지급은행이 서로 다른 자기앞수표의 교환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은행간 자금조정방식을 7월부터 자금적수조정방식에서 이자정산방식으로 변경하였다.<sup>7)</sup> 이에 따라 자기앞수표 교환과 관련된 은행간 차액결제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그만큼 은행의 결제자금 부담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결제리스크도 낮아지게 되었다.

또한 자기앞수표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타행발행 정액권 자기앞수표 소지자가 은행 창구에서 수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타행환공동망을 통해 도난 및 위조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에 의한 현금지급서비스 제도」를 마련하여 8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동 제도의 도입으로 고객앞 자기앞수표 대금의 현금 지급과 익영업일 발행은행으로부터의 수표대금 결제간의 시차 때문에 수표대금 지급

〈표 Ⅲ-6〉

#### 한은금융망 자금결제동향<sup>1)</sup>

(단, 조원, %)

		2003 상반	2004 상반	증감률
건	원 화 자 금 이 체	5,045( 75.6)	5,660( 86.6)	12.2
	(총 액 결 제)	4,368( 65.5)	5,020( 76.9)	14.9
	(차 액 결 제)	676( 10.1)	640( 9.8)	-5.5
	국 고 금 수 급	1,589( 23.8)	828( 12.7)	-47.9
	한국은행대출	26( 0.4)	27( 0.4)	4.0
	국 공 채 결 제	13( 0.2)	17( 0.3)	34.5
합 계		6,673(100.0)	6,532(100.0)	-2.1
수	외 화 자 금 이 체	10( - )	10( - )	0.0
	원 화 자 금 이 체	82.7( 95.4)	101.8( 95.6)	23.1
	(총 액 결 제)	68.5( 79.0)	88.7( 83.3)	29.5
	(차 액 결 제)	14.2( 16.3)	13.1( 12.3)	-7.8
	국 고 금 수 급	2.3( 2.7)	2.6( 2.4)	10.4
	한국은행대출	0.9( 1.1)	0.9( 0.9)	0.8
합 계		86.7(100.0)	106.5(100.0)	22.8
액	외 화 자 금 이 체	124( - )	166( - )	33.4
	(백 만 달 러)			

주 : 1) 일평균 기준, ( ) 내는 구성비

7) 어느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다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받은 경우 고객앞 현금(또는 예금이자) 지급은 당일에 일어나지만 발행은행으로부터의 수표대금 수취는 은행간 차액결제를 통해 다음 영업일에 이루어지므로 지급은행은 영업일수 차이만큼의 자금부담이 발생한다. 이러한 자금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수표 발행은행은 그 금액(적수기준) 만큼 지급은행에 무이자 콜론을 제공하였다가 다음 영업일에 상환 받는데 이를 자금적수조정방식이라 하며, 대신 그 금액에 대한 이자만을 지급하는 방식을 이자정산방식이라 한다.

은행이 부담하게 되는 결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동 현금지급서비스를 순채무한도 설정대상 거래 및 결제이행 보장용 담보증권 제공대상 거래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외환을 매매할 때 국가간의 시차 때문에 매도통화의 지급과 매입통화의 수취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외환결제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하여 2004년말 가동을 목표로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였다. 그 일환으로 3월 국제 외환동시결제 전문은행인 미국 CLS은행<sup>8)</sup>의 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BOK-Wire)을 연결하는 CLS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CLS은행이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으로서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계정을 통해 원화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밖에 6월에는 한은금융망 업무 담당직원들의 긴급상황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산장애나 재해 등으로 한은금융망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경우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의 자금결제 업무를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 (支給決済制度 監視機能 강화)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총괄관리 및 감시 기능을 한국은행에 부여한 개정 한국은행법의 시

8)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 은행은 전 세계 외환거래의 동시결제(payment versus payment)를 실현하기 위해 1999년 17개국 66개 금융기관이 뉴욕에 설립한 외환결제 전문 민간은행으로서 2002년 9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가동하였다. CLS은행은 결제통화로서 당초 미국, 일본, 영국, 유로, 스위스, 캐나다, 호주 등 7개국 통화를 지정하였으나 2003년 9월에는 싱가포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4개국 통화를 추가하였고 2004년말에는 한국, 홍콩,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 통화를 추가할 예정이다.

〈표 Ⅲ-7〉

평가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분류

핵심 지급결제 시스템 <sup>1)</sup> (6개 시스템)	한은금융망	
	은행공동망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시스템
채권장외시장 결제시스템		
중요 지급결제 시스템 <sup>2)</sup> (9개 시스템)	은행공동망	CMS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전자화폐(K-CASH)공동망 B2C전자상거래지급결제시스템 B2B전자상거래지급결제시스템
		지로시스템
		유가증권시장 증권결제시스템
		협회중개시장 증권결제시스템

주 : 1) 해당 시스템에서 결제가 완결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지급결제시스템  
 2) 해당 시스템에서 결제가 완결되지 못할 경우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전체 지급결제시스템과 통화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지급결제시스템

행에 맞추어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및 효율성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국제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평가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sup>9)</sup>」 및 국제증권위원회기구(IOSCO)의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한 권고<sup>10)</sup>」 등에 맞추어 핵심 지급결제시스템,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및 기타 지급결제시스템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핵심 지급결제시스템 및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을 대상으로 평가기준의 충족여부에 관한 평가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상황과 금융기관 등의 지급결제업무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다.

9) BIS 산하 G-10국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지급결제제도위원회(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PSS)가 지급결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제정하여 공표한 원칙으로서 10개의 핵심원칙과 동 핵심원칙 적용을 위한 중앙은행 책무로 구성되어 있다.

10) BIS CPSS와 국제증권위원회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가 증권 및 청산결제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발표한 권고로서 1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